

“어린이집 CCTV 신뢰 대책 절실”

도의회 한완수 의원, 5분 발언서

영유아 학대 등 사회적 문제로 2015년부터 의무화했음에도 부모들의 열람은 제한적... “열람사유 제도 보완 등 이뤄져야”



실제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3,322건 전체 대비 1.3%에 불과하다. 반면 80%가 넘는 20만6,000여건은 원장이 열람본 경우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체 8,312건 중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128건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실제 CCTV 열람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환경복지위·입실)은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된 CCTV를 둘러싸고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불신과 의심의 벽이 좁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자녀가 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부모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CCTV 열람 요청에 대해 어떤 경우는 원장의 재량으로 CCTV를 확인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CCTV 확인 후 부모

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반대로 처음부터 아동과 선생님의 생활 보호,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거부하거나 복잡한 절차상의 이유로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CCTV 열람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 건수는 25만 3천여 건으로 이중

을 언제까지나 중양부처의 탓만 할 수는 없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생산적인 논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신뢰 확보를 위한 제언으로 ▲명확한 열람사유 제도 보완 ▲열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도청내 영상정보 열람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더 이상 CCTV가 관찰과 의심을 품은 눈이 아닌 안심과 신뢰를 위한 따뜻한 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임시회 개최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한 도지사과 김승환 도교육감,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철회 결의’

최찬욱 도의원 발의



전북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최찬욱(환경복지위원장, 전주 10) 의원은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철회 및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14일 최찬욱 위원장은 결의안을 통해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지표 달성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대외이미지 훼손과 병원수익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급변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대대적으로 성찰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탐비킴 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당장 응급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는 ‘응급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으며 법의 취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입법목적에 맞게 즉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고압산소치료기 도입해야”

김명지 도의원, 5분발언서



공공보건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전북도내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말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대한 응급치료가 가장 중요한 고압산소치료기가 도내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명지(전주8) 의원은 14일, 제359회 임시회에서 “도내에서 언제든 강릉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만에 하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타 지역으로 응급환자를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대한 응급치료가 가장 중요한 고압산소치료기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릉사고가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일어난 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면서 “사고라는 것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이후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압산소치료기는 급성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 등 신체의 산소 농도를 급격히 올려야 할 경우 응급처치에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우리 도에는 단 한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어떤 곳에서 언제 강릉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타 지역으로 응급환자를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까운 전남으로 환자이송할

지라도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만 운영하고 있어 이미 환자가 있다면 또 다시 몇 시간을 소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이에 그는 “최근 캠핑 문화 발달 등 번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환자가 전국적으로 수천 명씩 나오고 있다”면서, “도 역시 최근 빈곤층, 농촌 고령자의 연탄 사용량 증가, 캠핑족 증가, 화학물질 유출 증가 등으로 인해 날로 고압산소치료 장비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전북을 대표하는 국립 병원인 전북대병원의 경우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고, 도내 병원 중 원광대병원이 유일하게 도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지 의원은 “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압산소치료기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두 대학병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입을 원하는 병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황의탁 도의원 “무주리조트 하수관리 허점 노출”

부영 덕유산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무주리조트 숙박시설 등에서 오염된 물이 등방천으로 흘러들어 1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매년 찾는 무주리조트의 하수관리와 하천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탁 의원은 14일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황 의원은 “무주리조트 2017년 상하수도 사용량은 138만9,783m³인데 반해 하수도 사용량은 61만4,018m³로 상수도 사용량과 비교, 절반 이하의 수준

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천호의 연간 물 사용량은 2017년 204만 2,872톤, 사용료 5361만 6천원(톤당 26.24원)으로 살천호 연간 물사용량과 하수도 사용량이 3대 1의 큰 차이를 보여 상당한 물이 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주리조트 하수관리 설치년도 및 하수관로 교체 내역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관경 200mm에서 300mm까지 10cm 구간은 약 24년에서 29년전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무주군과 협조하여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하수관로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김종식 도의원 “도내 유아에게 무상급식 실시”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4일 제35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모든 유아에게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최근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무상교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무상교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무상교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이에 김종식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로 수업료와 급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명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진정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이고, 사립유치원 등의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식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